상월결사 2주년도 '불교중흥' 위해 회향

11월 11일 기념식 및 삼보순례 회향식 봉행

순례 완보 88명에 증서수여
선서화전 수익금 단체 전달
자승스님 "불교 위기극복을"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불교 변화를 이끌고 있는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2주년을 맞아 불교진흥을 위한 회향무대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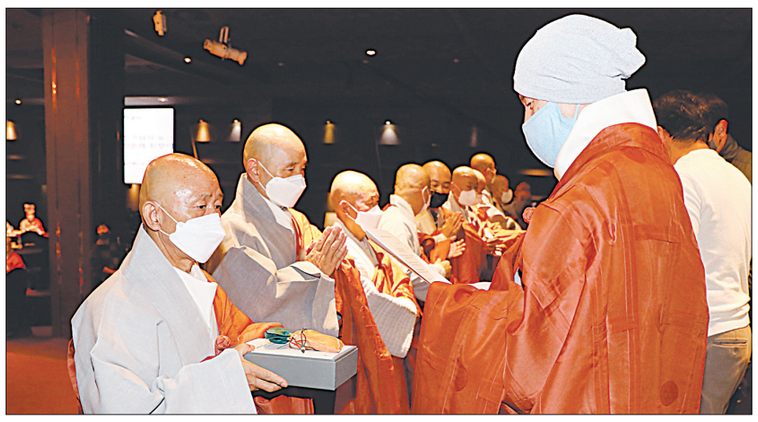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1월 11일 서울 봉은사 인근 라빌웨딩홀에서 상월결사 2주년 기념식 및 삼보사찰 108천리 순례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날 기념식 및 회향식은 부처님 법대로 살기 위해 2019년 11월 11일 입재한 위례 상월선원에서의 90일간 용맹정진, 그리고 이어진 2020년 만행결사 자비순례와 2021년 만행결사 삼보순례 등을 돌아보고, 새로운 힘을 얻는 자리였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 보고에서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천리순례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19일간 승보종찰 송광사부터 법보종찰 해인사를 거쳐 불보종찰 통도사까지 423km에서 펼쳐졌다"며 "비구 49명, 비구니 6명, 우바새 14명, 우바이 26명 등 사부대중 94명이 첫발일 내딛어 88명의 사부대중이 완보했다. 순례지원단은 14명이 완보해 108명이 보살행을 이루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화엄사 실상사 표충사 천은사 등 유서깊은 9곳 사찰 참배와 함께 전라도와 경상도 등 5개 광역 단체와 순천 곡성 남원 고령 합천 창녕 밀양 등 12곳 기초단체를 순례하며 지역마다 뛰어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 지역민들의 삶과 문화를 체득했고 불교 중흥의 원력을 키웠다"고 발표했다.

이날 삼보순례를 완보한 88명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완보증서가 책으로 만들어져 전달됐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직접 완보증서를 수여하며 생활 속에서 상월결사 정신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총도감 호산 스님은 삼보순례 기간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과 김순호 구례군수에게 감사패와 죽비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불교중흥을 위한 선서화전 수익금을 불교단체들에게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모연액 29억 5300만원 중 불교단체 지원기금 28억 여원이 조성됐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사진 오른쪽)이 삼보사찰 천리순례 완보자들에게 책으로 만들어진 완보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지원기금은 △불교법당 건립과 불교성전 법보시 등을 포함한 종립 동국대 중흥기금 △불교언론 중흥기금 △탄자니아 보리가람 학교 지원금 △나란다축제 등 청소년 포교 진흥기금 △인도만행 기금 1억원 △전국비구니회 발전기금 △중앙승가대 교육기금 △학인스님 장학금 △중앙종책모임 종책개발기금 등으로 모두 회향됐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는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이웃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포교했는지 되새겨야 한국불교의 총체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원로의원 자광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동국대 상임이사 성월 스님,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중앙승가대 총동창회장 성행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및 주요사찰 스님들이 참여했다. 또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채석래 의료원장,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 "정청래 막말 대신 사과"

11월 8일 원행 스님 예방서
"韓문화 뿌리 불교 지원"을
나눔의집 문제 해결 의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월 8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사진은 예방 직후 기념촬영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찰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매도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했다.

이 후보는 1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원행 스님의 "국정감사 당시 노고가 많으셨다"는 발언에 화답하며 "우리 식구가 불교계에 심려를 끼쳤다. 당 대표도 사과했지만, 저도 대표할 자격이 있다면 대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불교문화는 한국문화의 뿌리이며, 불교계는 국가가 할 일 대신하며 재산권 등에 제약과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규제와 제약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과 예우가 필요하다.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행 스님은 "궁이나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찰은 스님이 사시니까 국가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사찰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와 49조에 의거해 받는 것이다. 제대로 된 인식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후 면담은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전환 이후에도 원행 스님과 이 후보는 불교문화재 정책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나눔의집 문제에 대해서도 불교계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마감 전까지 해당 문제가 상당히 진전된 결과를 도출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불교계의 의견을 들어보니 마무리가 다 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잘 살피겠다"는 뜻을 조계종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행 스님은 "이 후보께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는 만큼, 집권 여당 후보로서 그 뜻을 잘 계승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신성민 기자

봉암사 인근 채석장 개발허가 최종 불허

남부지방산림청, 11월 4일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봉암사 인근에 허가됐던 채석장 개발이 최종 불허됐다.

조계종 사회부 환경위원회는 11월 5일 "남부지방산림청이 봉암사 인근 채석장 개발에 대해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봉암사 인근 채석장 개발 사업 논란은 지난 6월, 산림청이 채석장 사업을 재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채석장으로 개발하려던 부지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폐광산으로, 봉암사까지 거리가 겨우 1km 거리에 불과하다.

개발 허가 발표 후 조계종 환경위는 환경전문가들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보호에 반하는 정책을 편 산림청을 규탄하며 채석장 개발 허가의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사노위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11월 11일 심사 연기에 성명
8일부터 릴레이 기도회 돌입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국민이 누려야 할 평등권과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즉각 제정돼야 한다."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기한이 2024년 5월 29일로 재연장된 것에 대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회노동위)가 성명을 내고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노동위는 11월 11일 '국회, 14년 동안 미뤄온 차별금지법 심사 또 미뤄…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심사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상정한지 43초 만에 결정된 것이기에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11월 8일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노덕현 기자

사회노동위는 성명에서 "법사위원장이 연장 요구 건을 상정했지만 여야의원들의 침묵으로 단 43초만에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염원이 다시 미뤄지게 됐다"며 개탄하고 "14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나중에'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노동위는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격주 기도회, 국회-청와대 염불행진, 국회 둘레길 오체투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오체투지,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단체 순회 30km 오체투지 등을 해왔다. 또 11월 8일 국회 천막농성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회를 봉행한 바 있다.

사회노동위는 "국민의 90% 가까이가 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촉구하는 법을 일부 기독교의 반대와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연제까지 여야는 미루고 끌려다닐 것이냐"며 "일부 보수기독교의 차별금지법 반대에 여야가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사회노동위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차별로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고, 죽음에 이르는 국민들이 있는데 또 미루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평등권과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선학원 쇄신, 법진 이사장 청산서 시작"

선학원 미래포럼, 11월 10일
법진 스님 재선출 반대 집회
"선학원정상화 진력" 선포해



"선학원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인적 쇄신은 성범죄 전과자 최종진(법진)을 청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성범죄 전과로 물의를 빚은 법진 스님을 21대 이사장으로 재선출한 것과 관련,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이 집회를 열고 공식 항의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11월 10일 서울 선학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법진 스님의 퇴진을 요구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선학원미래포럼 위원 심원 스님은 '성범죄전과자 법진(최종진) 선학원 4선 이사장 웬말이냐'는 제하의 성명에서 "100년의 찬란한 역사를 바탕으로 21세기 한국불교의 중추역할을 해야 할 선학원이 창립정신을 망각하고 재산관리기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넘어 이제는 성범죄자 이사장으로 인해 세간의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선학원을 이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간 장본인은 법진 이사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선학원미래포럼은 선학원이 세간에서 비난받고 있는 것은 법진 스님이 '성범죄 전과자'이기 때문이라며 "청정승풍을 수호하고 '정화의 산실' 역할을 했던 선학원 역사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라고 개탄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창건주 · 분원장은 법진 이사장이 이사장과 이사직에 물러나고 선학원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법적, 행정적 조치는 물론 집회와 시위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임은호 기자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창종법회

종정 보명당 석원정 (사서실장 석현경)

총무원장 현광 석자운

승정원장 석보경 종회의장 석월암 원로의장 석선학
승 정 석법일, 석법광, 석도암, 석덕인 원로위원 석일현, 석대원, 석도명, 석보성, 석혜림, 석법안, 석해진
호법원장 석법성 감찰원장 석도관 호계원장 석도일 교 육 원 장 석유심 총무부원장 석화성 기획원장 석정현
문화원장 석현법 포교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구담 비구니원장 석정인 비구니회장 석서정

각 교구원장

부산동종무원장 석혜명 대구 종무원장 석진성 김해 종무원장 석법원
부산서종무원장 석경일 밀양 종무원장 석경오 영천 종무원장 석혜심
창원 종무원장 석혜일 전남 종무원장 석현경 제주 종무원장 석경담
마산 종무원장 석법상 경남 종무원장 석혜운 전북 종무원장 석해산
울산 종무원장 석진공 강릉 종무원장 석원공 광주 종무원장 석청오
칠곡 종무원장 석현승 경북 종무원장 석화성 인천 종무원장 석지원

전국신도회

중앙신도회회장 양주석(慈光) 중앙신도부회장 장광옥(法雲)
사무총장 강위석(慈明) 고문 이효근(普泉), 장금석(定慧)
신도회장 안희윤(普德行) 신도부회장 윤현옥(金剛行)
신도총무 변성희(大德信) 감사 최호연(淸眼)

종단법률 자문위원

변호사 심규명, 김영길, 이승현 법무사 이기동 세무사 김정석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 외부사진
– 반명함 사진 3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취

총무원 TEL 052·247·4848
FAX 052·247·4849
H·P 010·3565·2462

창종법회장소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박달1리 617 대원사 **일시** : 2021년 11월 20일(토) 오전 10시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총본산 마하사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642 ☎ 052·247·4848